해경, 긴급신고전화 지방청서 통합 운영

5개 지방청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19개 해경署 상황대응·구조활동 집중

해양경찰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이 기존 해양경찰서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 운영된다.

해양경찰청은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전면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접수과정에서 드러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접수에서부터 상황전파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왔다. 이에따라 상황처리 혼선, 대응시간 지연,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개(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를 전담하고 해경서에서는 상황대응과 인명구조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해양사고 시 신고자가 119·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기관(소방·경찰)에서는 해경서 상황실이 아닌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연결한다.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새로 도입한 공청시스템을 가동해 사고위치 등 관련정보·통화내용이 관할 해양경찰서·현장구조세력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상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서 상황실 인력 30명이 충원됐다.

아울러 112·119에서 요청한 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시간이 지난해 평균 51초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28.5초로, 44%가 단축되는 등 유관기관(소방·경찰)과의 협력체계가 향상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 접수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메르스 사태, 발생 11일 만에 종결 선포만 남아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1차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데 이어 확진 환자 60대 A씨에 대해 감염 완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메르스 사태는 발생 11일만에 사실상 종결 선포만 남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한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됐다"며 "오늘 저녁 일반병실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의 경우 메르스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하게 된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일 쿠웨이트 현지에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후 국내에 귀국한 뒤 지난 7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 이날 최종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

다만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가 남아있다.

이 검사에서 21명 모두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오는 22일 0시에 격리를 해제할 전망이다.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점을 감안할 때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사실 이번 사태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9월 22일 0시까지는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그 때까지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호랑나비가 전하는 가을 18일 오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들녘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댕강나무꽃 주위를 날아다니며 꿀을 따고 있다.

사학혁신위, 교원소청위 결정 거부 대학 강력 제재

순천청암대와 전남도립대, 교원소청위 결정 수년째 불이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대학들에게 제재가 내려진다. 전남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순천청암대와 전남도립대 등 2개 대학이 해당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학교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대학측의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에 따르면 교원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지난 11일 의결했다.

교원소청위는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준사법 행정기관이다.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다.

순천 청암대는 2014년부터 이 대학 교수 3명에 대해 재임용탈락부터 직위해제, 파면, 해임처분 등을 내렸지만 교원소청위는 학교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수들은 교원심사위 결정을 받고도 결국 지난 5년동안 힘겨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14억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후 대학측 보복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 등 주요 보직 교수와 교직원 4명은 성추행을 고소한 교수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개인정보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립대 유아교육학과 김모(여) 교수도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지난 4월 교원소청위가 대학측에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립대는 모 교수가 학생 성추행으로 해직된 후 복직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자 '교재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김교수를 해임했다.

전남도립대는 전남도지사가 교수 임면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복직이 안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이란서 버스와 유조 트럭 충돌 21명 사망

이란 중부에서 17일 밤 버스가 유조 트럭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 떨어진 나탄즈와 카샨을 잇는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목격자가 찍은 동영상은 유조 트럭과 충돌한 버스가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란은 연간 약 1만700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교통 안전이 최악인 국가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교통 법규 무시와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전하지 못한 차량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14명 탑승한 러시아 군용기 실종

14명이 탑승한 러시아 군용기 IL-20기가 17일 저녁(현지시간) 시리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 인근에서 레이더 상에서 사라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17일 오후 11시(모스크바 시간, 한국 시간 18일 오전 5시) 시리아 해안으로부터 약 35㎞ 떨어진 흐메이밈 기지로 귀환하던 러시아 군용기 IL-20기와의 교신이 중단됐다. IL-20기는 흐메이밈 기지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사라진 항공기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시리아 라타키아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고 시리아 언론들은 전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 미사일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리아 국영 TV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한 것으로 지목했다. 라타키아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CNN은 소식통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발사한 시리아의 대공포에 러시아 IL-20기가 실수로 격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지중해 상공에서 14명이 탄 러시아의 IL-20 군용기 1대가 실종됐다고 확인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 4대가 라타키아주의 시리아 목표물을 공격하는 동안 IL-20기의 흔적이 레이더 상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같은 시각 이 지역에 프랑스 프리깃함 오베르뉴함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됐음이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서냉동트럭에 시신 보관 논란

멕시코 서부 잘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에서 157구의 신원 미상의 시신을 보관한 냉동 트럭이 장기 주차하면서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17일(현지시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잘리스코주는 시체보관소가 꽉 차 더이상 시신을 보관할 수 없게 되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들을 냉동트럭에 보관하고 있다.

트럭이 주차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으로 과달라하라시 당국은 이미 몇 차례 주차 장소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시체보관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또다른 시유지로 옮겼고 결국 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까지 트럭을 옮겼다.

로베르토 로페스 라라 잘리스코주 내무장관은 "이는 공무원들의 무감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시신을 실은 냉동트럭은 시체보관소로 돌아가야 한다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냉동시설은 시신의 부패를 어느 정도 늦추긴 하지만 시신들은 대부분 잘리스코주 내 비밀 묘지에서 수습된 것들로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 트럭에 실려졌다.

주 인권위원회의 하비에르 페를라스카는 "시신을 냉동트럭에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며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동트럭에 시신을 보관한 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며 차라리 매장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에서는 폭력 증가에 따른 시신들의 무더기 발견으로 각 지역 당국들이 부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만 멕시코 전국에서 1만6339구의 살인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증가한 것이다.

잘리스코주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주들에서도 시체보관소에 더이상 시체를 보관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